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 ----- ----- -- 둔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p><u>제10조 ~ 제12조 (생략)</u></p>	<p>6.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u></p> <p>7.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p> <p>8. <u>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p> <p>② <u>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u>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u></p>
--------------------------------	---